

“원활한 승계위한 제도개선 촉구”… 中企 ‘입법추진委’ 출범

중기중앙회 등 12개 단체 참여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골자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와 사회적 여론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조직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기업승계 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기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공동위원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선진국은 기업승계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을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면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기업승계 지원 취지를 감안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기업상속공제보다 확대’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경우 70세를 넘는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도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승계 제도가 잘돼 있는 독일의 경우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웃돌고, 일본도 평균 3800건이 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전국 13개 시도 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곽수근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은 해당 기업들의 경쟁을 넘어 수천 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사전증여 한도를 늘리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세대를 대표해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업계 첫 도입

연간 7200억 자금 조기 현금화
중기부, 상생결제 지급방식 수정

공영홈쇼핑이 ‘유통망 상생결제’를 처음 도입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까지 확대되면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왼쪽 3번째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은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류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납품대금연동제 발의 환영”

기술혁신형 기업 중심 안착 적극 협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정부의 납품대금연동제 발의에 환영 입장장을 내놨다.

22일 이노비즈협회는 “그동안 기업의 특성에 맞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했지만 실제 참여기업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서 연

분석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 보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업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고에 발맞춰 협회도 전국 9개 지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앞장서는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에 여·야·정 간 협력을 통한 본 법인의 조속히 처리로 더욱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 농심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400억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심이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농심,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됐다.

농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400억원 규

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등을 지원한다.

농심은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납품 단가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체·품목별 납품단

기를 반영,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미래차 분야 전환 지원

광주 하남산단서 중소기업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휴먼전자를 찾아 미래차 전환 분야 구조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신규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돋는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자동차 부

품 기업들이 전기·수소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이사장 외에도 광주광역시 송희종 기반산업과장, 광주그린카진흥원 김덕모 원장을 비롯해 휴먼전자 최윤식 대표 등 광주·전남지역 미래차 전환 분야 중소벤처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